

## 전문가와 양육미혼모의 지원방향을 논하다

### I. 개요

#### ◆ 개요

- 부모의 혼인상의 지위와 관계없이 미혼모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2012.8.6. ~ 8.14 (8일)간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26명, 여성단체 소속 6명, 학자/연구자 7명, 유관단체 소속 14명, 총 53명이 의견을 제시함.
- 조사내용은 미혼모 증가 현상, 양육미혼모의 당면 문제, 미혼부의 책임 강화, 자녀양육비 등이며, 특히, 양육미혼모의 자녀양육비 국가 대지급 및 구상권 제도 논의에 대한 의견을 물음.

양육미혼모 비율은 1984년 5.8%, 1998년 7.2%, 2005년 31.7%, 2009년 66.4%로 증가함(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2009).

- 이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 요인에서 비롯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아직도 미혼모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은 열악한 상태임.

#### ◆ 양육미혼모(한부모) 지원 제도 현황

- 정부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의 양육미혼모에게는 기초생계비를 지급함. 그러나 기초생계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미혼모가 많이 있음.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만 12세미만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함.
- 입소가능한 시설로는 산전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혼모자시설, 2세미만 영유아가 있는 미혼모를 위한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출산후 자녀를 입양보낸 미혼모를 위한 미혼모공동생활가정이 있음. 또한, 지역사회 미혼모부자를 위한 거점기관이 전국 16개 시도에 17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현재,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최저 생계비 150% 이하 만 24세미만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자립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아동양육비는 12세미만 아동 대상 월 1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음.

### II. 양육미혼모 현황 및 지원 제도

#### ◆ 양육미혼모 증가

- 미혼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확보에 어려움이 따름. 다만, 최근 양육하려는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음이 포착됨

집필자 : 김혜영 부연구위원 · 김정미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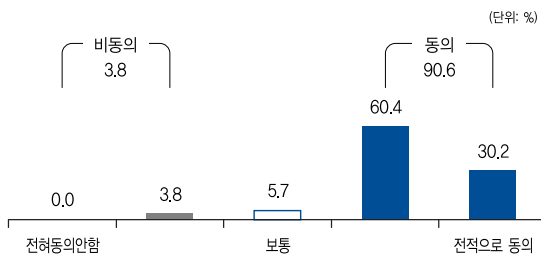
### Ⅲ 양육미혼모 증가와 지원 정책

#### 이슈 #1

#### 미혼모 증가 현상

##### ☞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 증가 현상의 지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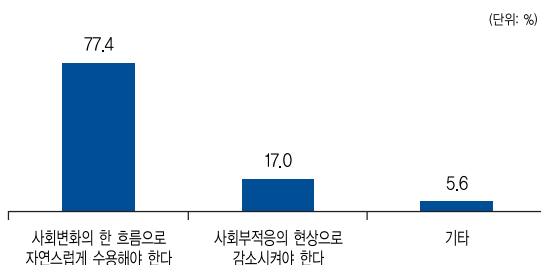
-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가 향후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는 비율은 90.6%(전적 동의 30.2% + 동의 60.4%)로 나타남. '동의안함' 응답률은 3.8%로 대부분의 조사응답자는 향후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그림 1〉 양육미혼모 증가현상의 지속성에 대한 동의

##### ☞ 미혼모 증가 현상에 대한 수용성

- 미혼모 증가 현상에 대하여 두 개의 항목 중 하나를 선택을 할 경우, 77.4%는 '사회변화의 한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임. 나머지 17.0%는 '사회부적응의 현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고 응답함
- 응답자 유형별로는 여성단체, 학자/연구자 집단에서는 조사응답자 전원이 '사회변화의 한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공무원 집단에서는 '사회부적응의 현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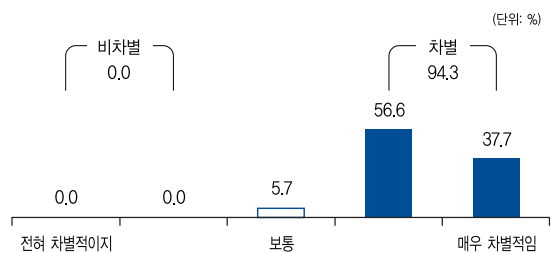
〈그림 2〉 미혼모 증가 현상의 수용성 의견

#### 이슈 #2

#### 미혼모에 대한 차별

##### ☞ 미혼모에 대한 차별 정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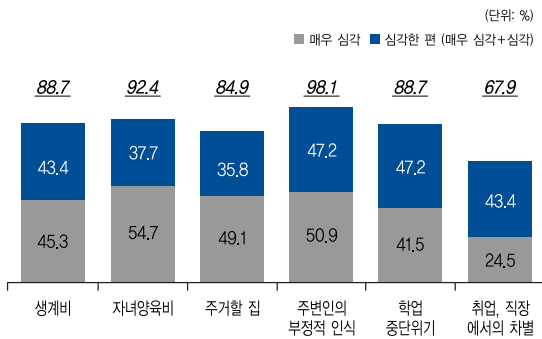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미혼모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라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94.3%(매우 차별 37.7% + 차별 56.6%)가 차별이 있다고 응답함. 차별적이지 않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한사람도 없음.



〈그림 3〉 미혼모 차별 정도에 대한 인식

##### ☞ 미혼모가 당면하는 문제의 심각성 인식 정도

- 미혼모가 당면하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본 결과 '생계비' 문제에 대하여는 조사 응답자의 88.7% (매우 심각 45.3% + 심각 43.4%)가 심각하다고 응답함.
- '자녀양육비' 문제에 대하여는 92.4%(매우 심각 54.7% + 심각 37.7%)가 심각하다고 응답함.
- '주거할 집'에 대하여는 조사응답자의 84.9%(매우 심각 49.1% + 심각 35.8%)가 심각하다고 응답함.
- '주변인의 부정적 인식'에 대하여는 98.1%(매우 심각 50.9% + 심각 47.2%)가 심각하다고 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학업 중단 위기'에 대하여는 88.7%(매우 심각 41.5% + 심각 47.2%)가 심각하다고 응답함.
- '취업, 직장에서의 차별'에 대하여는 67.9%(매우 심각 24.5% + 심각 43.4%)가 심각하다고 응답함.
- 미혼모 당사자의 문제를 볼 때, 심각하다(매우 심각 + 심각한 편)는 응답률은 '주변인의 부정적 인식' 98.1%, '자녀양육비' 92.4%, '생계비' 88.7%, '학업 중단위기' 88.7%, '주거할 집' 84.9%, 취업, 직장에서의 차별' 67.9% 순으로 나타남. '매우 심각'의 응답률만을 비교할 때 '자녀양육비'와 '주변인의 부정적 인식'의 경우 가장 높은 응답률이 나타남.



〈그림 4〉 미혼모가 당면하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정도

### 이슈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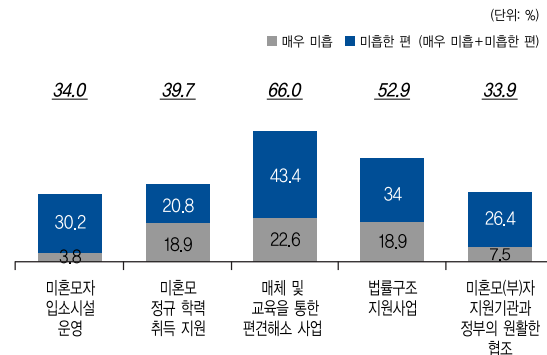
## 양육미혼모 정책에 대한 평가

### ☞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

- '미혼모자 입소시설 운영'에 대해서 응답자의 32.1% (매우 좋음 5.7% + 잘하는 편 26.4%)가 '잘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함. '보통'은 34.0%, '미흡'은 34.0%(매우 미흡 3.8%, 미흡 30.2%)로 나타남.
- 미혼모 정규 학력 취득 지원에 대하여는 '잘 추진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20.7%(매우 좋음 7.5% + 잘하는 편 13.2%), '보통'은 39.6%, '미흡'은 39.7%(매우 미흡 18.9% + 미흡 20.8%)으로 잘 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높지 않음.
- '매체 및 교육을 통한 편견 해소'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응답자의 66.0%(매우 미흡 22.6% + 미흡 43.4%)가 '미흡'하다고 응답하였고 '보통'은 26.4%, '잘함'은 7.6%로, 매체 및 교육을 통한 편견 해소에 대한 평가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매우 낮아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법률구조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응답자의 52.9%(매우 미흡 18.9% + 미흡 34.0%)가 '미흡'하다고 응답하였고, '보통'은 30.2%, '잘함'은 17.0%로, 법률구조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절반을 넘음.
- '미혼모(부)자 지원기관과 정부의 원활한 협조'에 대한 평가는 '보통'이라는 응답률이 43.4%, '미흡' 33.9% (매우 미흡 7.5% + 미흡 26.4%), '잘함' 22.7%로

미혼모(부)자 지원기관과 정부의 원활한 협조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이라는 의견이 많고, 만족보다는 미흡의 의견이 더 많이 나타남.

- '잘하고 있다(매우 좋음+잘하는 편)'는 응답률은 '미혼모자 입소시설 운영'(32.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미혼모(부)자 지원기관과 정부의 원활한 협조'(22.7%), '미혼모 정규 학력 취득 지원'(20.7%) 등으로 나타남.
- '매체 및 교육을 통한 편견 해소'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응답자의 66.0%(매우 미흡 22.6% + 미흡 43.4%)가 '미흡'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적었으며,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다수임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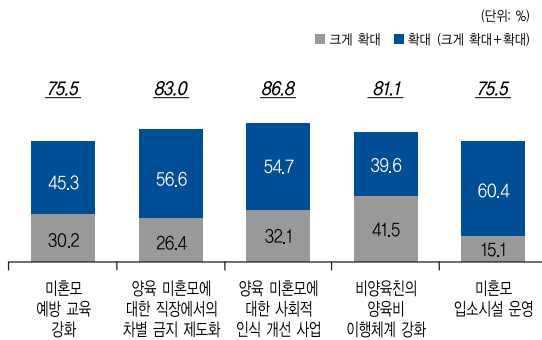


〈그림 5〉 양육미혼모 자립 지원 추진 정책에 대한 평가

### ☞ 개별 미혼모정책의 확대여부

- '미혼모 예방 교육' 정책에 대하여는 조사응답자의 75.5%(크게 확대 30.2% + 확대 45.3%)가 확대해야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축소 의견은 1.9%에 불과하였음.
- '양육미혼모에 대한 직장에서의 차별 금지 제도화' 정책 추진에 대하여는 조사응답자의 83.0%(크게 확대 26.4% + 확대 56.6%)가 확대해야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축소 의견은 1.9%임.
- '양육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에 대하여는 조사응답자의 86.8%(크게 확대 32.1% + 확대 54.7%)가 확대해야 된다고 응답함. 확대 의견으로는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정책임.
- '비양육친의 양육비 이행체계 강화'에 대하여는 조사응답자의 81.1%(크게 확대 41.5% + 확대 39.6%)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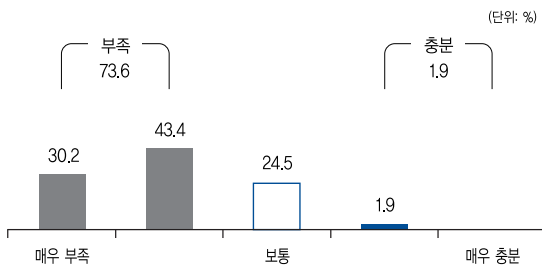
- '미혼모 입소시설 운영'에 대하여는 조사응답자의 75.5%(크게 확대 15.1% + 확대 60.4%)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며, 축소 의견은 3.8%임.
- 미혼모 지원 사업 확대의 필요성(크게 확대 + 확대)이 높게 나타난 정책은 '양육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양육 미혼모에 대한 직장에서의 차별 금지 제도화' 등의 순임.



〈그림 6〉 미혼모 지원 정책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 ㉠ 미혼모 지원 사업의 충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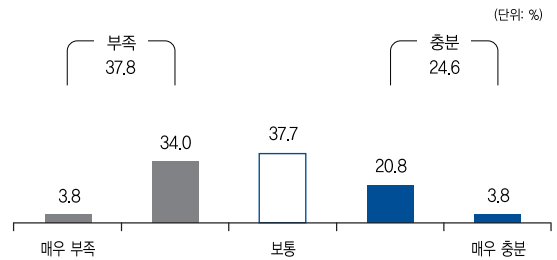
-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충분성에 대하여 의견을 물음.
-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15만원 지급(최저생계비 150%이하)'에 대하여 조사응답자의 73.6%가 '부족(매우 부족 30.2% + 부족 43.4%)하다'는 의견임. '보통' 24.5%, '충분' 1.9%로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15만원 지급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임.



〈그림 7〉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15만원 지급' 제도에 대한 충분성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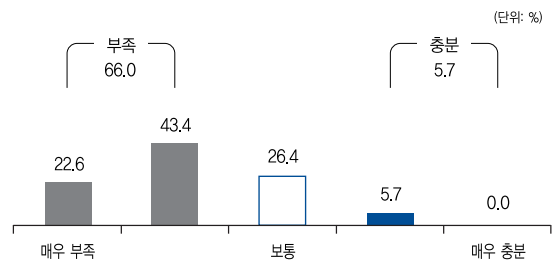
- '검정고시학습비 연 154만원 한도내 지급(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에 대해서 조사응답자의 37.8%가 '부족(매우 부족 3.8% + 부족 34.0%)하다'고 응답함.

'보통' 37.7%, '충분' 24.6%로 나타남. 검정고시학습비 연154만원 한도내 지급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은 절반이하로 나타남.



〈그림 8〉 '검정고시학습비 연154만원 한도내 지급' 제도에 대한 충분성 의견

- '자립촉진 수당 가구당 월 10만원(기초수급권자 가구, 신청당시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 참여 실적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는 조사응답자의 66.0%가 '부족(매우 부족 22.6% + 부족 43.4%)'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보통' 26.4%, '충분' 5.7%로 자립촉진 수당으로 가구당 월 10만원 제공에 대하여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



〈그림 9〉 자립촉진 수당 가구당 월 10만원 지급 제도에 대한 충분성 의견

## Ⅳ. 미혼부 책임 강화와 자녀 양육비 확보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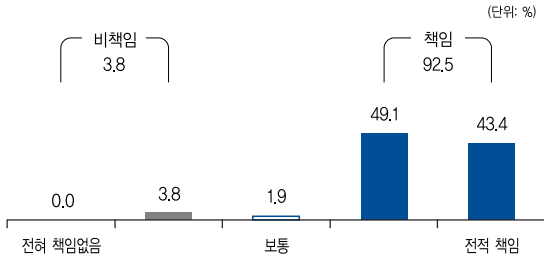
### 이슈 #4

#### 미혼부 책임과 자녀양육비 확보

##### ㉠ 미혼모의 출산에 대한 미혼부의 책임 정도에 대한 인식

- 미혼모가 아이를 출산한 경우, 미혼부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에 대하여 조사응답자의 43.4%는

'전적 책임' 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49.1%는 '책임이 있는 편'이라고 응답을 함. 미혼모가 아이를 출산한 경우 미혼부가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92.5%에 이르며, 책임이 없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3.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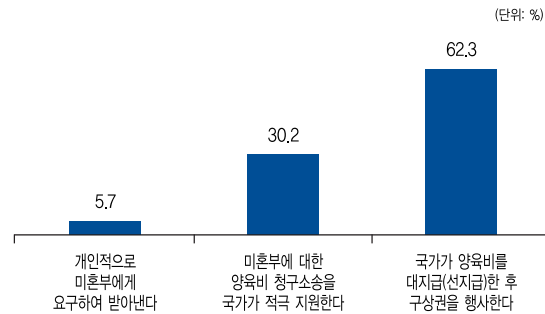


〈그림 10〉 미혼모의 출산에 대한 미혼부의 책임에 대한 인식

#### ▣ 미혼모의 자녀양육비 확보 방향

- 미혼모의 자녀양육비는 미혼모 당사자에게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음을 앞에서 알 수 있었음. 자녀양육비 확보에 대하여 어떤 방향이 적절하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물음.
- 조사응답자의 62.3%가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선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응답함. 그 다음은 '미혼부에 대한 양육비 청구소송을

국가가 적극 지원한다' 30.2%, '개인적으로 미혼부에게 요구하여 받아낸다' 5.7%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1〉 미혼모의 자녀양육비 확보 방향

- 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대다수가 이를 지지하기 보다는 개인, 미혼부에 대한 책임을 우선하도록 하는 제도 운영을 지지하는 응답자도 여타 집단에서 보다 많이 나타남. 국가 부담에 대한 우려가 여타 집단에서보다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사료됨.
-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의견에 남성보다 더 많은 비율로 지지응답자가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음

〈표 1〉 미혼모의 자녀양육비 확보 방향 의견

(단위: 명)

구분		사례수	개인적으로 미혼부에게 요구하여 받아낸다	미혼부에 대한 양육비 청구소송을 국가가 적극 지원한다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한다
전체		53*	3	16	33
소속	공무원	26	3	13	9
	여성 단체	6	0	2	4
	학자/연구자	7	0	0	7
	유관 단체	14	0	1	13
성별	남성	18	1	8	9
	여성	35	2	8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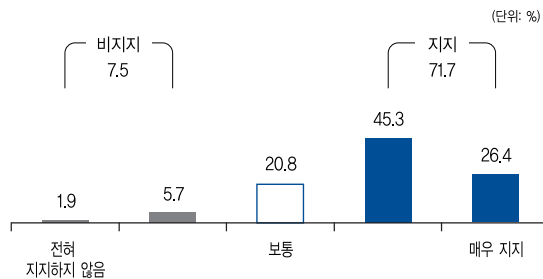
\* 1인은 무응답 처리함.

## 이슈 #5

### 자녀양육비 이행 체계 강화 방향

#### ☞ 자녀양육비 이행 체계로서 정부 조직 및 인력 확대 의견

- 자녀양육비 이행 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 조직, 인력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조사응답자의 71.7%(매우 지지 26.4% + 지지 45.3%)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7.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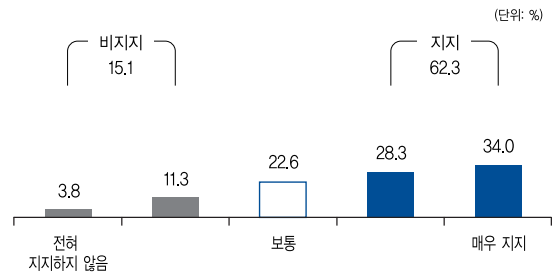


〈그림 12〉 자녀양육비 이행 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 조직·인력 확대에 대한 지지 의견

#### ☞ 자녀양육비 '국가의 대지급 후 구상권 행사' 제도 논의에 대한 지지 정도

- 미혼모의 자녀양육비 확보의 긴급성을 해결하기 위해

비양육친에게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에 미혼 양육친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가 자녀양육비를 대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 하는 의견에 대해서 응답자의 62.3%(매우 지지 34.0% + 지지하는 편 28.3%)가 지지한다고 응답함.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15.1%임.



〈그림 13〉 국가의 자녀양육비 대지급 후 구상권 행사 제도 논의에 대한 의견

- 여성단체, 학자/연구자, 유관단체 소속의 조사응답자와 비교하면, 공무원의 경우는 '국가의 자녀양육비 대지급 후 구상권 행사' 제도의 도입에 대한 지지가 약함을 볼 수 있음.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공무원인 경우에서만 나타남.
- 성별 간 지지 정도를 보면, 여성의 경우 지지 정도를 강하게 표명한 응답자가 다수임을 볼 수 있음.

〈표 2〉 '국가의 자녀양육비 대지급 후 구상권 행사' 제도 논의에 대한 지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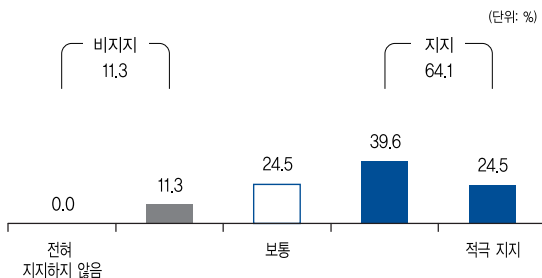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지지 하지 않음	지지하지 않는 편	보통	지지 하는 편	매우 지지
전체		53	2	6	12	15	18
소속	공무원	26	2	6	7	7	4
	여성 단체	6	0	0	1	2	3
	학자/연구자	7	0	0	2	2	3
	유관 단체	14	0	0	2	4	8
성별	남성	18	1	1	4	6	6
	여성	35	1	5	8	9	12

## 이슈 #6

### 혼인외 출산의 국가지원과 저출산 해소

#### ☞ 혼인외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의 보호·지원에 대한 지지

- 혼인외 출산·양육에 대하여 국가가 보호·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자의 64.1%(적극 지지 24.5% + 지지 39.6%)가 지지한다고 응답함. '보통' 24.5%, '지지하지 않음' 11.3%로 혼인외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 보호 및 지원에 대해서 대부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유형별로는 공무원의 경우 '보통' 38.5%, '지지하지 않는 편' 11.5%의 응답률이 나타나 '지지' 의견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학자/연구자 집단에서는 조사응답자 전원이 '지지' 의견을 표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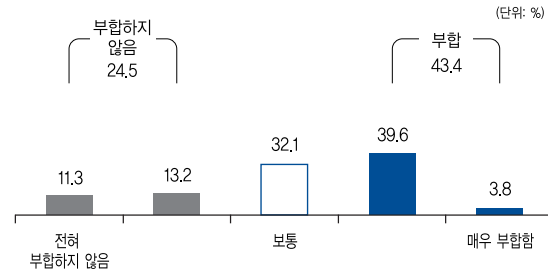


〈그림 14〉 혼인외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보호·지원에 대한 지지 정도

#### ☞ 미혼모에 대한 국가 지원과 저출산 해소 정책의 부합성 의견

- 미혼모에 대한 국가지원이 정부의 저출산 해소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결과, 조사응답자의 43.4%(매우 부합 3.8% + 부합하는 편 39.6%)가 '부합한다'고 응답하였고, '보통' 32.1%, '부합하지 않음' 24.5%의 응답률이 나타남.
- 미혼모에 대한 국가 지원이 정부의 저출산 해소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응답률은 25%정도임. 부합한다고 보는 응답률도 45%정도로 절반을 넘지 못함.
- 미혼모에 대한 국가지원을 저출산 해소와 연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함. 공무원과 유관단체 소속

집단에서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일부 나타남. 학자/연구자는 조사응답자 전원이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그림 15〉 미혼모에 대한 국가 지원과 정부의 저출산 해소 정책 방향의 부합성 의견

## V. 양육미혼모 지원 정책에 대한 제언

### 1.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사업의 적극적 수행

-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는 향후 증가할 것임. 이러한 현상을 사회변화로 받아들이고 사회 통합의 측면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임. 미혼모에 대한 차별은 매우 심한 정도라고 볼 수 있음. 본 조사의 전문가 의견에서도 90%이상이 미혼모에 대한 차별은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응답함. 그 중에서도 양육미혼모는 주변인의 부정적 인식과 함께 자녀양육비, 생계비, 주거 문제 등 생존 위협, 학업 중단, 위기 등에 직면함.
- 현재 정부가 미혼모 입소시설 운영, 미혼모 정규학력 취득 지원, 매체 및 교육을 통한 편견해소 사업, 법률구조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 의견은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특히, 매체 및 교육을 통한 편견 해소 사업은 그 결과가 일반 매체를 통해서 수행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홍보 또는 캠페인이 노출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정부는 미혼모, 양육미혼모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 해소되도록 편견해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임.

## 2. 미혼부의 책임 강화

- 미혼모가 아이를 출산한 경우 미혼부는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음 국민익식 조사 결과(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에서도 미혼부의 자녀양육비 아이에 대한 아버지 역할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85%정도에 이르렀으며 금번의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에서도 미혼모 출산에 대하여 미혼부가 책임이 있다는 응답률은 92.5%임.
- 비양육 미혼부의 자녀양육비 집행과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미혼부에 대하여 자녀양육비 소송을 고려하거나 자녀양육비를 실제로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음.
- 미혼부가 출산 아동에 대하여 인지하고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야 할 때임.

## 3. 자녀양육비 이행 체계 마련

- 비혼의 경우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아이를 출산한 미혼모가 양육을 책임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양육미혼모는 생계유지와 자녀양육비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음. 자녀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양육친(미혼부)이 자발적으로 자녀양육비를 제공하거나 소송을 통하여 자녀양육비를 청구, 지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그러나, 자발적으로 자녀양육비를 양육친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소송 단계는 복잡하여 미혼모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일이라는 점과 미혼부와외의 대면을 꺼리는 이유 등으로 활성화가 안됨.
- 정부가 출산한 아이의 건강과 행복한 성장을 위하여 자녀양육비 이행체계 안에서 중요한 권한을 갖고 기여를 해야 함. 비양육친(미혼모)의 신청에 의하여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지급 소송을 대행하고, 지급 의무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함. 여성가족부가 이에 대하여 미혼모를 지원하는 집행 권한을 갖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때임.

## 4. 자녀양육비 대지급 및 구상권 행사를 위한 법·제도 마련

- 자녀양육비는 한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여 시급하게 해결을 요하는 사안임. 비양육친의 양육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발성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 정부가 양육친의 자녀양육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함. 정부는 자녀양육비 이행체계 안에서 이를 수행할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양육친의 자녀양육비 신청에 대응해야 함. 자녀양육비를 신청한 경우 신속히 양육친의 경제 상태를 파악하고, 기본적인 자녀양육비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임.

- 영국, 독일처럼 정부가 자녀양육비를 대지급하여 자녀양육비의 긴급성을 해결하고 차후에 비양육친의 자녀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징수 절차를 따르는 행정력을 동원해야 함. 고지, 청구에 의하여도 자녀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구상권을 행사하여 동산, 부동산에 대한 강제적 행정 처분권한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임. 자녀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종의 불이익을 주는 것과 함께 형사 책임까지도 부과할 수 있어야 함.
- 자녀양육비는 미혼모 또는 한부모가 홀로 감당하기 보다는 비양육친의 의무는 이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인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집행되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제도화를 이루어야 함

## 5. 미혼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

- 양육미혼모를 지원하는 사업이 보다 실질적으로 양육 미혼모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늘려야 함. 현재,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기준에 의하여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아동 양육비에는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함. 자립촉진 수당도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하여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원 수준이 매우 약함 금번 전문가 조사에서도 아동양육비 월 15만원 자립촉진 수당 월 10만원에 대하여 충분하다는 의견은 10%에도 미치지 못함.
- 미혼모자 입소 시설의 충분성 기초적인 자녀양육비 지급액수의 증액, 자립촉진 수당 등의 증액을 통하여 미혼모 자립, 출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